

규제개혁 시리즈 15-06
2015. 11.

최근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동향과 시사점

목 차

<요약>

I. 검토배경	1
II. 일본의 수도권 정책	2
1. 개요	2
2. 수도권 억제기	
1) 수도권규제 도입	3
2) 수도권규제 조정	5
3. 수도권규제 완화기	
1) 동경권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6
2) 공업제한법 폐지	8
3) 도시재생 프로젝트	10
4. 세계화 추진기	
1) 수도권 광역지방계획	11
2) 국제전략총합특구	13
3) 국가전략특구	17
III. 시사점	21

- 이 자료는 본회 규제개혁팀 안종현 차장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3771-0230 FAX : 02-6234-5268 E-mail : ajh@fki.or.kr

□ 일본은 '90년대까지 수도권을 질서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수도권규제정책 시행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수도권을 질서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58년)
- 수도권을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공업제한, 녹지보전, 거주지개발 등의 중점기능 중심으로 재편
- 공장제한법을 통해 기성시가지 중 일부지역을 공업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공장, 학교 등 대규모 인구집중시설의 신설을 제한('59년)
- '60~'70년대에는 공장제한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자 공장 증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등 수도권규제를 강화
- '80~'90년대에는 중소기업과 일부 업종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수도권 입지 억제라는 규제의 큰 틀은 40여 년간 유지

□ '00년 이후 '수도권 억제-지방발전'에서 '도시중심 자립적 균형발전'으로 국토정책 전환

- '90년대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
- 중국이 급성장하고 장기불황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인식
- 국토균형정책을 수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 「21세기 국토 그랜드디자인」을 발표하면서('98) 대도시 리노베이션이 포함된 4대 국토 전략 제시
-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기업 해외 이전 등의 이유로 공업제한법의 효과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공업제한법 폐지('02)
- 일본경제의 중심인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대도시권의 규제완화를 추진('02)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수도권내에서 「동경만 임해부 기간적 광역 방재거점 정비」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재생프로젝트 시행('02)

□ '09년 이후,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정비사업 추진

- 수도권광역지방계획에서 수도권의 비전을 “세계의 경제사회를 리드하는 품격(風格)있는 수도권”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시('09)

요 약

-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 경쟁력 우위를 갖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완화, 세제 혜택, 재정·금융 지원('10)
-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총괄거점 또는 연구개발거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10) 지정 등 동경권을 메가시티 기능 강화 위주로 개발('10)
-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동경의 도시경쟁력을 세계3위 수준으로 상승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전략으로 국가전략특구 제도 도입('13)
- 동경권에서 국제 의료시설, 국제비즈니스 교류 거점, 교통망 정비, MICE 기능 강화 다목적홀, 외국인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 중점 추진

□ 우리도 수도권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발전전략 추진 시급

- 일본이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동경권내에서 국제 교류·의료시설, 교통망을 정비하면서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국가전략적으로 수도권외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정책 추진
- 동경권 등 선진국 수도권과의 글로벌 경쟁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수도권외의 메가시티 기능 강화하는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 필요

□ 우리나라도 '수도권 억제정책'에서 '대도시권 발전정책'으로 국토정책 전환 필요

- 글로벌 경쟁, 고령화·저성장 등 우리나라 수도권 내외부적 환경이 일본과 유사한 점을 감안, 일본의 국토·수도권 정책을 참고할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는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 검토 필요

□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 관련 수도권규제 완화 추진

- 자연보전권역 입지규제 완화 등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수요가 있는 시급한 기업 투자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
- 경기북부 등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경기도 내 낙후지역에 대해 수도권규제 적용 예외 인정 필요

□ 지난 30년간 시행된 수도권규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

- 인구와 산업의 분산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만족하지 못해서 국토 균형발전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더 이상의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규제가 지속되거나 강화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존재

□ 수도권규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

- 수도권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적당히 조정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글로벌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시기를 놓칠 수 있음
- 30년간의 수도권규제의 효과,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 주요 선진국들의 수도권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해서 백년대계 차원에서 국토·수도권정책 재정립 필요
- 대통령은 연두기자회견('15)에서 올해 안에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수도권규제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언급
- “종합적인 국토정책”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비수도권을 포함한 국토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의견 수렴”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유사한 경제·사회 발전과정을 거친 일본의 수도권 정책 참조 필요

- 글로벌 경쟁심화, 고령화·저성장 등 우리나라 수도권과 내외부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은 수도권규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수도권 발전정책을 추진 중
- 우리나라 보다 20년전에 수도권 규제를 시행한 일본은 서비스업 위주로의 산업구조 개편, 기업 해외이전 등을 이유로 '02년에 공장제한법을 폐지
- '10년 이후에는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총합전략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을 통해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도권 육성 정책을 추진
- 일본의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의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수도권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1. 개요

□ '50년대 후반부터 시행된 일본의 수도권정책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수도권 억제기, 수도권규제 완화기, 세계화 추진기로 구분

- 수도권 억제기('56년~'99)에는 수도권정비법('58), 공업제한법('59)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정책화하고 강화
 - '수도권의 질서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수도권정비법을 제정하고,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권역을 구분하고 계획적으로 관리
 -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장 및 대학 신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58년에 「수도권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업 등 제한에 관한 법률(공업 등 제한법)」을 제정
 - '86년에 수립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도쿄도 구부 중심의 일극의존구조를 다핵 다권역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업무핵도시 제도 도입
- 수도권규제 완화기('00~'09)에는 도쿄권 리노베이션 프로그램('00), 공업제한법 폐지('02)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폐지
 - 도쿄권 리노베이션 프로그램('00)을 발표하고, 동경권의 비전을 글로벌 경제중심으로 풍요로운 도시문화를 향유하는 국제환경문화도시권으로 설정
 - 「수도권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업 등 제한에 관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장·대학 입지규제를 완전 철폐('02)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수도권내에서 「동경만 임해부 기간적 광역방재거점 정비」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도시재생프로젝트 시행('02)
- 세계화 추진기('09~현재)에는 수도권광역기본계획('09), 국제전략총합특구('10), 국가전략특구('13)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추진
 - 수도권광역지방계획('09)에서는 수도권의 비전을 “세계의 경제사회를 리드하는 품격(風格)있는 수도권”으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으로 “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제시
 - 국제전략총합특구가 도입되면서 동경 도심부를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총괄거점 또는 연구개발거점 유치를 목표로 하는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로 지정('10)
 -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 제도가 도입, 동경권에서는 국제비즈니스 이노베이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6개 국가전략특구사업 추진 중

2. 수도권 억제기

1) 수도권 규제 도입

□ '50년대 동경권의 인구집중 가속화와 무질서한 팽창 현상 발생

- '50년 중반이후 동경권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생활·교통 환경 악화, 시가지의 무계획적인 팽창 등에 따른 도시기능의 혼란 우려 증가
 - '50년 628만명이던 수도권 인구가 타 지역으로 부터의 인구유입에 의해 '56년에는 831만명으로 급속히 증가
- 인구증가와 함께 시가지의 무질서한 팽창, 교통조건 악화, 주거환경 악화, 녹지공간의 부족, 공공시설 설비 부족, 주택 부족 등의 대도시 문제 발생

□ 수도권정비법 제정('58)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제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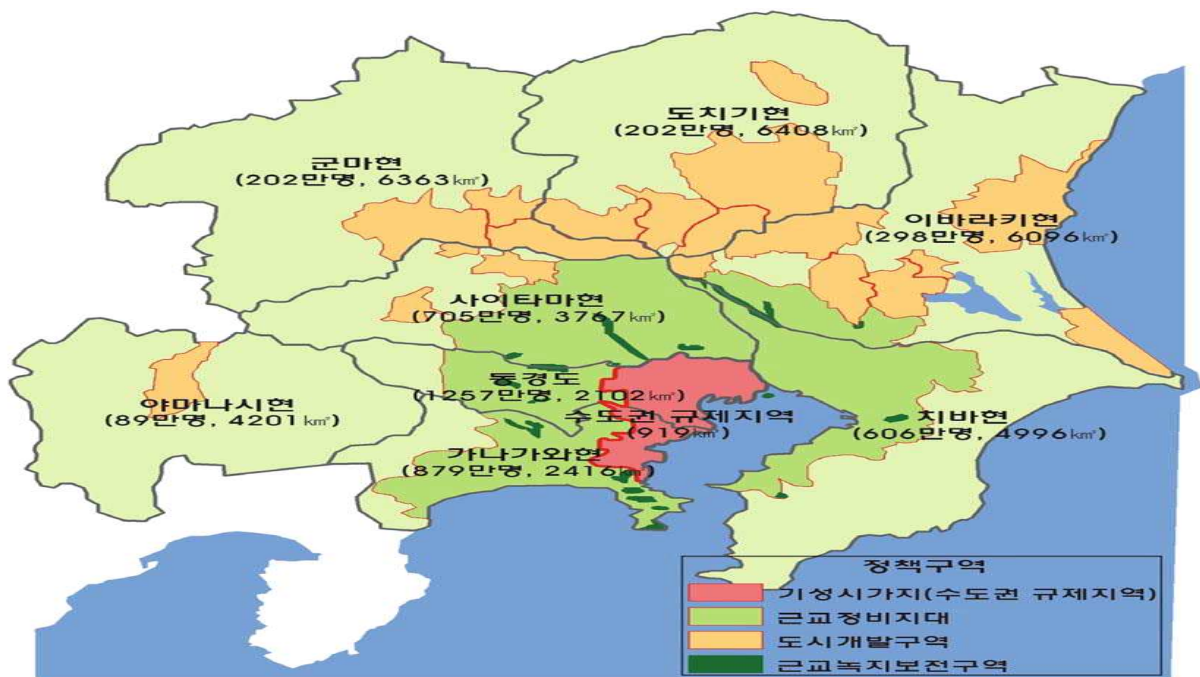
-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수도권을 건설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정비법 제정('58)
 - 수도권에서의 공장·학교 입지규제의 근거는 수도권정비법에 명시, 구체적인 행위제한은 수도권의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업제한법('59)에 규정
- 동경도를 중심으로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사이타마현, 치바현, 가나가와현, 야마나시현 등 1도7현 중의 일부를 수도권정비법의 정책구역으로 지정
 - 정책구역의 면적은 12,851Km²으로 전국 면적(377,972Km²)의 3.4% 수준
- 정책구역을 기성시가지, 근교정비지대, 도시개발구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공업제한, 녹지보전, 거주지개발 등의 중점기능 중심으로 재편
 - 기성시가지 : 동경도 및 연접하는 주요 도시를 포함한 구역 중 산업 및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시가지 구역 → 공장, 학교 등의 입지 제한
 - 근교정비지대 : 기성시가지의 근교로 계획적으로 시가지를 정비하고, 녹지를 보전하는 구역
 - 도시개발구역 : 기성시가지 및 근교정비지대 이외의 수도권 지역으로 공업도시, 거주도시 등으로 발전시킬 구역
 - 근교녹지보전구역 : 근교정비지역내에서 특히 녹지보전 효과가 높은 지역

<권역별 수도권 정책구역>

권역	면적(km ²)	범위	비고
기성 시가지	959	동경도(동경도특별구, 미타카시, 무사시노시),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이타마현(가와구치시)	공장, 학교 입지 제한
근교 정비지대	6,374	동경도(하치오우지시), 사이타마현(가와고에시), 치바현(치바시) 등 162개 시정촌	계획적 시가지 정비, 녹지보전
근교녹지 보전구역	157	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 동경도(하치오우지시, 히가시무라야마시) 등 41개 시정촌	근교정비지역내 녹지 보전효과 높은 지역
도시 개발구역	5,518	사이타마현(구마가야시), 이바라키현(츠치우라시) 등 94개 시정촌	공업도시 등으로 발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2006

<수도권 권역구분>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2006

□ 공업제한지역내에서 공장, 학교 등의 신설 제한('59)

- 수도권내 구체적인 행위제한을 규정한 「수도권 기성시가지에 대한 공업 등 제한에 관한 법」(이하 공업제한법) 제정('59)
- 기성시가지 중 동경도 구부과 무사시노市와 미타카市를 공업제한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인구집중시설의 신설을 제한
 - 1,600m² 이상 공장과 2,000m² 이상 학교의 신축은 도도부현지사의 승인, 3,000m² 이상 공장의 신설은 국토교통대신 사전 동의 사안으로 지정

2) 수도권규제 조정

□ 수도권 규제 강화('62~'72)

- '70년대 초반까지 고도 경제성장을 기록하면서 공업제한법 시행('58)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시화 문제가 심화되자 공업지역제한 규제를 강화
 - 공업제한지역내 신설 뿐만아니라 증축도 규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승인대상 기준 면적을 공장은 1,600m²이상에서 1,000m²이상으로, 대학은 2,000m² 이상에서 1,500m²이상으로 하향조정('62)
 - 요코하마市, 가와사키市 및 가와구찌市를 추가해서 공업제한지역 확대('64)
 - 규제대상 공장 면적을 1,000m²에서 500m²로 하향조정하고, 동경만 임해지역을 공업제한지역에 포함('72)

□ 수도권 규제 일부 완화('83~'99)

- '70년대 후반부터 공업제한지역내에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수도권내 지자체가 규제완화를 요구하면서 규제완화 추진
 - 중소기업자의 경영합리화, 사업공동화를 추진하기 위한 신·증축 허용('83)
 - 야채제조업과 도시락제조업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적용제외 업종을 확대하고, 공장 이전적지에 대한 제한 완화('88)
 - 동경만 임해지역과 대학원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역산업집적활성화법('97.6월)에 의하여 중소기업집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승인대상 공장 기준면적을 500m²에서 1,500m²로 완화('99)

3. 수도권규제 완화기

1) 동경권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국토균형정책 기조를 수정한 「21세기 국토 그랜드디자인」 ('98) 발표

- '90년대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고도성장기에 추진한 국토균형 발전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
- 국가균형발전에 투입한 막대한 공공자금으로 국가부채가 642조원에 이르면서 국가재정위기가 주요 경제현안으로 부각('98)되고, 지자체가 국가 지원에 끊임없이 의존하게 되면서 지방경제의 자발적 발전동력 상실
- '70년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혁신체계(RIS)에 따라 추진한 테크로폴리스 건설사업은 중앙집중적 행정체계에 의해 추진됨에 따라 획일적인 산업단지만 양산
- 국토균형정책을 수정하는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 「21세기 국토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하면서 4대 국토전략 제시('98)
- 4대 국토전략은 다자연거주지역 창조, 대도시 리노베이션, 지역연계축 전개, 광역국제교류권 형성 등으로 구성

4대 국토전략

***다자연거주지역 창조** : 중소도시와 주변 농어촌지역으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도시적 서비스와 쾌적한 주거환경, 풍요로운 자연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자립적 권역을 다자연거주 지역으로 정의하고 21세기의 국토프론티어로 자리매김

***대도시 리노베이션** : 인구 및 기능 집중으로 과밀 폐해에 시달리는 대도시에 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재생하고, 국가 경제활력 유지에 적극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고차적 도시기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발휘 도모

***지역연계축 전개** : 지역의 자립을 촉진하고 활력 있는 지역사회 형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시정촌들이 도도부현의 경계를 넘어서 벨트형으로 연계되는 지역연계축을 전 국토에 걸쳐서 형성

***광역국제교류권 형성** : 도쿄 등 대도시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립적인 국제교류활동이 가능하도록 국토에 수개의 광역국제교류권 형성

□ 대도시 리노베이션의 일환으로 동경권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추진('00)

- 국제환경문화도시권(Metro ECOplex)을 수도권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편하는 동경권 리노베이션 프로그램 발표('00)
 - 동경권이 글로벌 「경제중심」으로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환경문제에 공헌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과 도시문화를 향유하는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
 - 동경권을 국제적 활력 선도, 신활력 창출, 광역연계 거점, 개성적 자립, 친자연형 거주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정비방향 제시

<영역 유형별 정비방향>

영역	권역	정비방향
국제적 활력선도	도쿄중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정보 발신 및 수신기능 정비 • 도보 생활이 가능한 마을만들기 실현
신활력 창출	도쿄만입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문화 창조와 대규모 환경인프라 형성 • 도쿄의 얼굴로 정비
광역연계 거점	환상거점도시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핵도시를 중심으로 교육, 연구개발 등의 특색을 살린 새로운 거점 만들기
개성적 자립	중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들의 다양한 거주지 선호에 대응하여 독자적 개성과 매력을 갖춘 컴팩트한 에어리어 형성
친환경형 거주	주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환경 회복을 통한 풍요로운 녹지 주거환경 정비

자료: 국토교통성, 2001. 수도권정비 관련 연차보고서

2) 공업제한법 폐지

□ 배경

- 인구·산업집중 완화 등의 정책효과가 미미하고, 기업 해외이전, 서비스업 중심 산업구조 변화 등 경제환경 변화로 공업배치법 폐지 여론 증대
 - 인구의 26.3%가 동경권에 집중되어 있고, 매출·수익 규모가 큰 기업의 본사가 동경에 소재.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업·공장의 인구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
 - 기업들의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기업들의 공장입지 선정 선택지가 국내(수도권/지방)에서 해외로 확대되는 등 산업입지 여건이 변화

- 중국이 급성장하고 장기불황으로 일본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의 역량강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필요성 인식

<공업제한법 폐지 배경>

구 분	내 용
정책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산업 분산효과 미미 - 인구의 26.3%인 3,341만명('00년 기준) 동경권에 집중 - 매출액·수익 규모가 큰 기업의 본사가 대부분 동경권에 소재
경제환경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의 해외진출 가속화(제조업 해외생산 비율: 3.0%('85) → 14.0%('99)) ○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 중심으로 전환 -기성시가지 제조업('60년 → '99년) : 사업소수 비중(19.7% → 12.1%), 종업원수 비중(41.1% → 14.2%) -기성시가지 서비스업('60년 → '99년) : 사업소수 비중(19.6% → 25.3%), 종업원수 비중(13.1% → 29.6%)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 및 건축규제 실시 등 환경관련 입법 및 규제가 강화되어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업제한법의 실효성 불분명

자료: 국토교통성, 「국토심의회 수도권정비 분과위 회의록」, 2001.11

□ 폐지 과정

- 제5차 수도권기본계획('99~'15)를 기점으로 수도권 정책의 초점을 '규제'에서 '수도권 기능의 강화·재편'으로 전환
- 국회, 국토교통성, 전문가 자문위원회(국토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공업제한법 폐지를 유도('98~'02)
 - 국회 참의원 의장이 공업제한법의 근원적 개정에 대해 정부에 질의('98)
 - 국토교통성 장관이 국토심의회에 공업제한법의 향후 방향에 대해 자문 요청, 국토심의회 보고서 제출('01)
 - 기성시가지내 지자체에서 공업제한법 폐지 건의('01)
 - 국토교통성, 공업제한법폐지법안 국회 제출 후 국회 의결 후 폐지('02)

<공업제한법 경과>

연도	제한대상	기준면적		제한구역	
		공장	대학	수도권	긴키권
1959	수도권에서의 신설	1600m ²	2000m ²	도쿄특별구, 무사시노시(武蔵野市), 미타카시(三鷹市)	
1962	증설도 제한	1000m ²	1500m ²		
1964	긴키권에서의 신증설도 제한			요코하마(横濱), 미사키(三崎), 가와구찌시(川口市) 추가	오사카(大阪), 사카이(堺), 히가시오사카(東大阪), 교토(京都), 아마가사키(尼崎), 아시야(芦屋), 고베(神戸)시
1972	법목적에 도시환경정비 개선 추가	500m ² (수도권)		케이힌(京浜)임해부추가	
1983	중소기업자의 경영합리화등을 위한 신증설을 허가기준에 추가				
1998	부식제조업, 도시락제조업 제외				
1999	규제완화	(중소기업 집적지구) 1500m ²	대학원 제외	케이힌(京浜)임해부를 제한구역에서 제외	
2002	법 폐지				

지역갈등 문제

- 공업제한법 폐지 과정에서 기성시가지 인근 근교정비지역이나 여타 지방과의 심각한 갈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됨
 - ⇒ '02년 당시 국가 현안이 기업의 기성시가지 집중이 아니라 기업의 해외진출이었기 때문에 공업배치법 폐지에 지방이 반대할 상황이 아니었음
 - ⇒ 역사적으로 봉건 영주제를 장기간 경험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일본의 문화도 공업제한법 폐지에 따른 지역갈등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로 거론됨
 - ⇒ '02년 일본의 1인당 GDP가 3만 9백 달러 수준으로 국민 전체가 선진국 수준의 생활을 영위했기 때문에 수도권-지방 차별 문제에 덜 민감
- 군마현 등 기성시가지 인접 근교정비지역에서 공업배치법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 대승적 차원에서 찬성을 설득하자 수용
 - ⇒ 국토심의회 수도권 정비분과위원회에서 국토교통성이 '95년을 정점으로 일본 GDP가 6년 연속 하락하고, 기업들이 대규모로 해외에 진출하는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줄 것을 집중 설득
 - ⇒ 공업배치법 폐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별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음

3) 도시재생 프로젝트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 중심 도시재생프로그램 시행

- 일본경제의 중심에 지가를 포함한 부동산가격이 있기 때문에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91년을 정점으로 하락한 부동산가격을 정상화시켜야 인식이 확산
- 일본의 경우 경쟁국에 비해 토지자산이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일본 22.3%('97), 영국 8%('96), 미국 7.5%('94)
- 고이즈미 정부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수단으로 주거환경정비를 포함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국가정책으로 채택하고 대도시권의 규제완화를 추진
- 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의거, 도시재생긴급정비지역을 지정하고 재생사업 추진(총 65개 지역, 6,612ha)
- 도시재생프로젝트는 다양한 도시 과제에 관하여 관계성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시민 주제가 참가·연대하여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수도권외의 복합적 도시 기능을 정비

- 과학, 비즈니스의 국제거점 형성 및 교류 기능 강화를 위해 동경만 임해부의 기간적 광역방재거점 정비, 수도권 환상도로 정비, 대학과 지역간 연계 협력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 19건 시행

<수도권 관련 도시재생 프로젝트>

결정시기	프로젝트 내용
제1차 (2001.6)	• 동경만 임해부의 기간적 광역방재거점 정비 • 대도시권 도시의 쓰레기 제로화 • 민자에 의한 중앙 관청시설 정비
제2차 (2001.8)	• 대도시권의 국제교류·물류기능 강화 • 수도권 환상도로 정비 • 도시부 보육소 대기아동 해소 • 도쿄도 미나미아오야마 1초매단지 재건축
제3차 (2001.12)	• 밀집시까지 긴급 정비 • 대도시권의 도시환경인프라 재생
제4차 (2002.7)	• 도쿄권의 계농과학 국제거점 형성
제5차 (2003.1)	• 오테마치합동청사 종전부지 활용을 통한 국제비즈니스거점 형성 • 중앙합동청사 제7호관 정비를 계기로 한 가구 전체 재개발 실시
제8차 (2004.12)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지구온난화 대책·열섬대책 전개
제9차 (2005.6)	• 방법대책과 도시계획의 연계를 통한 안전·안심도시 정비
제10차 (2005.12)	• 대학과 지역간 연계협력에 의한 도시재생 추진
제11차 (2006.7)	• 국가 공무원기숙사의 이전·재배치를 통한 도시재생 추진
제12차 (2007.1)	• 밀집시까지 긴급 정비 강화
제13차 (2007.6)	• 국제금융거점 기능 강화

자료: 국토교통성, 2011, 수도권정비 관련 연차보고서

4. 세계화 추진기

1) 수도권 광역지방 계획('09년)

□전국을 8개권역으로 나누는 광역지방계획 수립

- 전국단위 국토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종합개발법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 계획과 광역지방계획을 구분하는 국토형성계획법¹⁾을 제정('05)
 - 광역지방계획은 8개 계획권역(수도권(首都圈), 토호쿠켄(東北圈), 호쿠리쿠켄(北陸圈), 추부켄(中部圈), 긴키켄(近畿圈), 추코쿠켄(中國圈), 시코쿠켄(四國圈), 큐슈켄(九州圈)별로 수립
- 광역지방계획은 국토교통대신이 광역지방계획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다음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
 - 광역지방계획협의회는 국가의 특별행정기관, 관계 도부현, 관계 지정도시들로 구성되며, 시정촌은 광역지방계획의 책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도부현을 경유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제안할 수 있음

□수도권광역지방계획('09년)에서 수도권의 역할, 비전, 실천전략 제시

- 수도권의 역할로서 ① 동아시아·세계의 리딩(leading)권역으로서의 역할, ② 일본의 수도중추기능 보유권역으로서의 역할, ③ 약 4,200만 명의 다양한 주민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장소로서의 역할 등 3가지를 제시
- 수도권의 비전을 “세계의 경제·사회를 리드하는 품격(風格)있는 권역만들기”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수도권의 5대 발전방향 제시
 - ①일본 전체를 견인하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 ② 4,200만 인구가 살기 쉽고 아름다운 지역 실현, ③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재해에 강한 권역 실현, ④ 양호한 환경의 보전 및 창출, ⑤다양한 주체 간 교류·연계가 활발한 권역 실현
-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①국제비즈니스 거점 강화, ②산업 이노베이션의 창출, ③태평양·동해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④지역 향토산업 창출 등의 4가지를 규정

1) 일본은 1950년에 제정된 국토종합개발법에 입각해서 5차례의 전국 단위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고, 2005년 부터는 국토형성계획법에 따라 전국 단위 종합개발계획과 광역지방 단위 종합개발계획을 구분해서 수립하고 시행

2) 국제전략총합특구

□ 국가 新성장전략의 일환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 지정('10)

- 간나토오 정부는 ‘일본의 활기찬 부활’을 슬로건으로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인 新성장전략²⁾ 발표('10)
- 新성장전략에서 신성장산업과 외국기업의 집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 국제전략총합특구 제도 도입 방침을 제시
- 근거법인 총합특별구역법을 제정하고, 국제적 관점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을 엄선하여 전국적으로 5개 내외의 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방향 제시

□ 지자체의 신청을 바탕으로 선정, 관련 규제개선 및 금융·세제 지원

-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국제적 경쟁력 우위를 갖춘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전략총합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완화, 세제·재정·금융상 인센티브 부여
- 수상관저 내에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총합특별구역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총합특별구역기본방침’ 입안, 관련 시책 추진·조정 등의 업무 수행
 - 수상관저 내에 총리를 본부장, 장관들을 본부원으로 하는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총합특별구역 기본방침」 입안, 관련 시책 추진·조정 등의 업무수행
- 지자체 신청 → 총합특별구역추진본부 심의·결정 → 특구로 지정된 지자체, 총합특구계획 수립 → 관계 기관장 조정 → 총리 최종 승인
- 특구에 대해서는 규제완화, 세제·재정·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 제공
 - 특구내 설비투자액에 대해 취득가격의 15%(건물 8%) 세액공제 허용, 지정특정사업법인의 경우 지정일로부터 5년간 소득금액의 20% 공제
 - 특구 소요자금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이자 경감, 공기업인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에서 특구사업 시행 지차체에 대한 자금대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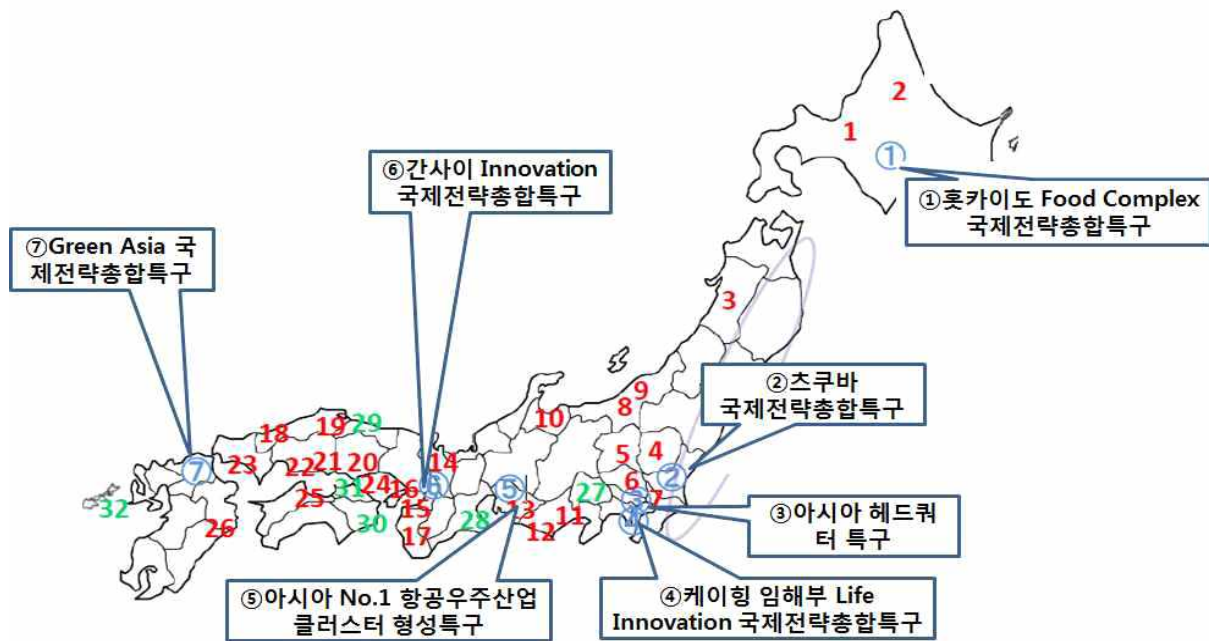
□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7개 국제전략총합특구 지정

- 동경권에는 동경 도심의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요코하마·가와사키 지역의 ‘케이싱 임해부 Life innovation 국제전략총합특구’, 츠쿠바시 및 주변지역의 ‘츠쿠바 국제전략총합특구’등 3개소 지정

2) 신성장전략은 7대 전략 분야와 우선 추진과제로 21개 국가전략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2020년까지 GDP 성장률을 연평균 명목 3%, 실질 2% 이상으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 7대 전략분야로는 ① 환경·에너지대국, ② 건강대국, ③ 아시아 경제, ④ 관광·지역, ⑤ 과학·기술·정보통신, ⑥ 고용·인재, ⑦ 금융 등을 선정.

- 오사카권에는 오사카시와 주변지역에 ‘간사이 innovation 국제전략총합특구’, 나고야권 에는 나고야시와 주변지역에 ‘아시아 No.1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 형성특구’ 지정
- 기타규슈·후쿠오카권에는 기타규슈시 및 주변지역에 ‘Green Asia 국제전략총합특구’, 삿포로권에는 삿포로시와 주변 3시·16정·2촌을 묶어서 ‘홋카이도 Food Complex 국제전략총합특구’를 각각 지정

<국제전략총합특구 지정 현황>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일본의 국제전략총합특구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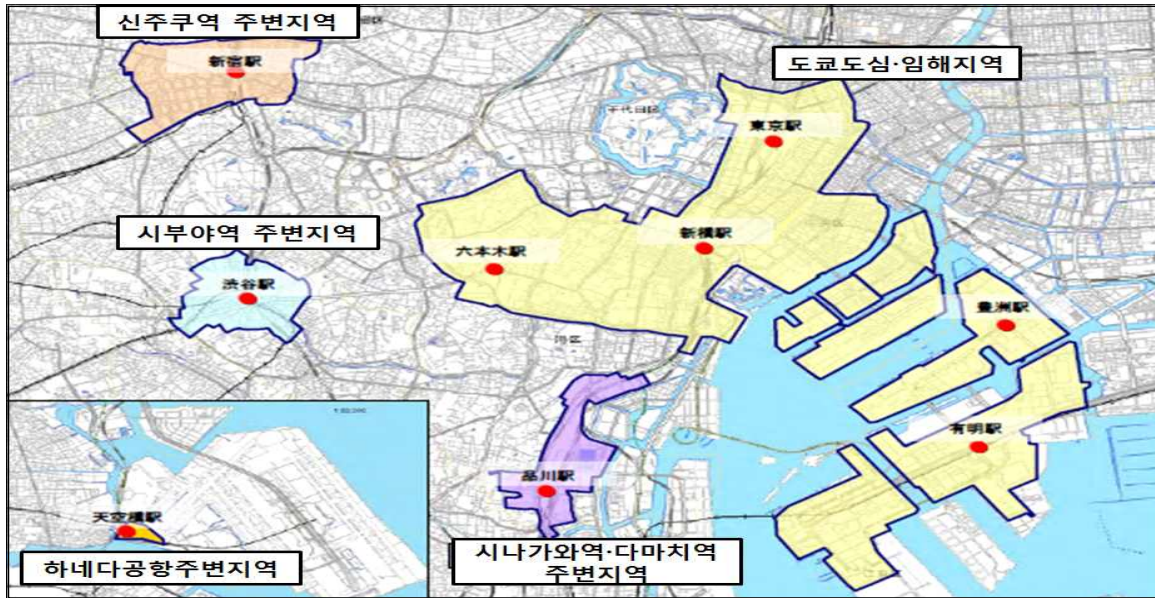
□ 수도권은 국제 비즈니스, 의료, 나노테크 등 메가시티 기능 위주 개발

- 수도권에서는 3개 특구지정을 통해 해외기업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환경 정비, 차세대 의약품·의료기기 중점개발, 생활지원 로봇 실용화 등을 추진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 다국적 기업 유치, 외국인 생활여건 정비>

- 대상지역 : 동경 도심의 5개 지역 25.9km²
- 목표 : 싱가포르, 홍콩, 상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다국적기업 아시아 지역본부 유치 경쟁에 동경이 본격적으로 참여해서, 5년간 500개 이상 다국적기업과 50개사 이상의 다국적기업 아시아 본사 및 R&D센터 유치

<아시아 헤드쿼터 국가전략종합특구>



자료 : 국토연구원, 2012, 「일본의 국제전략종합특구 제도」

○ 지원 : 정부와 동경도가 특구내 규제완화, 금융·세제 분야 지원 추진

<아시아 헤드쿼터 특구에 대한 지원>

사업명	주요내용	특례조치		
		규제특례	과세특례	금융지원
유치·비즈니스 교류사업	해외기업 유치, MICE거점 형성	하네다공항과 MICE거점 간 부정기항로 개설 허용	다국적기업 총괄거점사업, 연구개발 거점사업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금 감면	특구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 이자 지원
비즈니스 지원사업	비즈니스 컨시어지 설치·운영 등	취업예정 외국인의 체류 자격 심사기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	특구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 이자 지원
생활환경 정비사업	생활 컨시어지, 외국어교육 등	-	다국적기업 종사자·가족을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 국제 학교 등 설비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특구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 이자 지원
비즈니스 환경정비 사업	도시재개발 및 인프라 정비	-	국제회의 참가자 대상 집회·숙박시설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특구사업자에 대한 은행 대출금 이자 지원

* 동경도에서는 정부 지원과 별도로 특구내 설립된 다국적기업 아시아총괄거점 및 R&D센터에 대해서 법인사업세, 도시계획세 등을 5년간 감면

성 과

- '14년말까지 IT, 의료·건강, 환경, 전자·정밀기기 등의 업종에서 총 41개 다국적기업 거점 유치
- 유치 완료(23개사) : Aspen Pharmacare Holdings Ltd., / Biogen Idec, Inc., / REC Solar ASA, / Tigerspike Pty Ltd./ Vizury Interactive Solutions Pvt. Ltd./ TMA Solutions Co./ SurveyMonkey Inc./ UDG Healthcare, PLC / Catalent, Inc./ Acquisio Inc./ SENSUS USA Inc. / LinguaNext Technologies Pvt. Ltd. / Connect Worldwide International, Inc./ ReneSola Ltd. / GVS Group / Jiransoft Co., Ltd. / SunEdison, Inc. / Compagnie Plastic Omnium SA / DocuSign Inc. / QNAP Systems, Inc. / FarFavour Enterprises Ltd. 등
- 유치 예정(18개사) : Skyepharma PLC, BigSmile Products, LLC/, Zhejiang Longterm Medical Technology Co., Ltd/, Production Resource Group, L.L.C/, Atos Medical AB/, Voice Enabling System Technology Inc, / Pitney Bowes Inc. / Beautiful Earth Group, LLC / MedPlex Diagnostic Solutions Inc./ Unruly Holdings Ltd. / AVK Systems SA / OKpanda, Inc. / Aytu BioScience, Inc. / Novus Partners, Inc. / 익명 6개사 등

자료 : http://www.seisakukikaku.metro.tokyo.jp/invest_tokyo/japanese/why-tokyo/case-studies/index.html

<케이형 임해부 Life innovation 특구: 의료·건강 산업 창출>

- 대상지역: 임해공업지역 내 5개 지구 9.7km²
- 목표('16년 기준)
 - 의료·건강 산업 창출로 경제적 파급효과 2,035억 엔 달성
 - 의약품·의료기기의 임상 개시후 출시까지의 기간 단축으로 702억 엔 경제효과
 - 차세대 의약품·의료기기 신규개발로 218억 엔 경제효과

<주요사업 및 사업별 제공 특례>

사업명	특례조치
검체정보네트워크 사업과 데이터해석센터 사업	아지노모트 등 특정 민간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진단지원사업과 테일러에이드 의료전개	
건강진단 데이터 활용 검체 정보	금융지원(총합특구 지원 이자 보급금)
의약품·의료기기 평가, 해석수법 확립 등	

<츠쿠바 특구: 로봇·환경산업 육성>

- 대상지역: 츠쿠바시 전역과 주변지역 286.4km²
- 목표: 츠쿠바 과학기술 집적 활용 라이프·그린 이노베이션
 - 차세대 암치료 상용치료장치 보급시설수: 0('11) → 3('15)
 - 시장 투입 생활지원로봇 종류: 0('11) → 5종류 이상('16)
 - 조류 탄화수소오일 생산량(톤): 0('11) → 14('15) 등

<주요사업 및 사업별 제공 특례>

사업명	특례조치
차세대 암치료 개발 실용화	세제혜택(일본분석센터), 금융지원(특구지원 이자보급금)
생활지원 로봇 실용화	금융지원(특구지원 이자보급금)
조류 바이오매스 에너지 실용화	세제혜택((주)후지킨), 금융지원(특구지원 이자보급금)
세계적 나노테크 거점 형성	금융지원(특구지원 이자보급금)

4. 국가전략특구

1) 추진 배경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포함한 일본재흥 전략 발표('13)

- 아베노믹스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시장 창조 및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양적금융완화, 대규모 재정지출, 일본재흥전략 등의 정책 시행
- 국가전략특구 신설은 공항·항만 등 산업인프라 정비, 도시경쟁력 향상 등과 함께 국가재흥전략의 일환인 입지경쟁력 강화의 구체적 시행방안으로 제시 -세계에서 가장 비즈니스하기 좋은 사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총리 주도하에 추진하고, 국가전략특구 워킹그룹에서 국가전략특구법 제정을 통해 정책화

2) 제도 개요

□국가 주도로 선정 및 관리

- 지자체 신청에 의해 지정되는 국제전략총합특구와 달리 국가전략특구는 국가 주도해서 선정하고 관리
 - 「국가전략특별구역을 정하는 정령(政令)」에 따라 특구 지정 → 추진본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사업자로 구성) 설치 → 특구별 본부 작성 계획 내각 총리대신이 최종 승인 방식으로 추진

□국제적 경제활동 거점 지정, 과감한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 지원

- 일본 경제·사회의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국제적 경제활동 거점 형성을 목표로 특구를 지정하고 바위덩어리 규제개혁을 추진

<국가전략특구에 적용되는 규제완화>

분야	규제완화 항목
도시재생 도시계획	· 용적율·용도 등 토지이용규제 개선 · 도로공간 이용을 위한 도로법 특례 · 외국인 체제시설에 대한 여관업법 적용 제외
교육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공립학교 운영 민간개방 (공설민영학교 설치)
고용	· 「고용노동상담센터」 설치→ 신규개업 기업, 글로벌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의료	· 국제의료거점 내 외국 의사 진찰 허용 및 외국간호사 업무 허용→ 고도 의료기술 보유 외국인의사 유치 촉진 · 병상규제에 대한 의료법 특례 → 의료수준 제고
농업	· 농업생산법인에 대한 농지법 특례 → 6차산업화 촉진 · 농업위원회와 기초지자체 간 업무분담에 관한 특례 → 농지유동화 촉진 · 농가레스토랑 설치에 관한 특례 → 6차산업화 촉진 · 농업에 대한 신용보증제도 적용
기타	·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여관업법 시행규칙 특례 → 지역 활성화, 국제관광 촉진

자료: 수상관저(http://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 국가전략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설비투자, 연구개발투자, 민간도시재생사업 등에 대한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 방안 마련

<국가전략특구에 대한 세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설비투자	· 설비투자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50%(건물은 25%) 특별상각 또는 취득가액의 15%(건물은 8%) 법인세액 공제
연구개발투자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및 기구비품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의 12% 상당액을 법인세 특별공제 인정
의료분야 연구개발투자	· 기계·설비 등 취득 후 3년간 재산세 과세표준 가격을 1/2로 감면
민간도시재생사업	· 소득세, 법인세, 등록면허세 등 과세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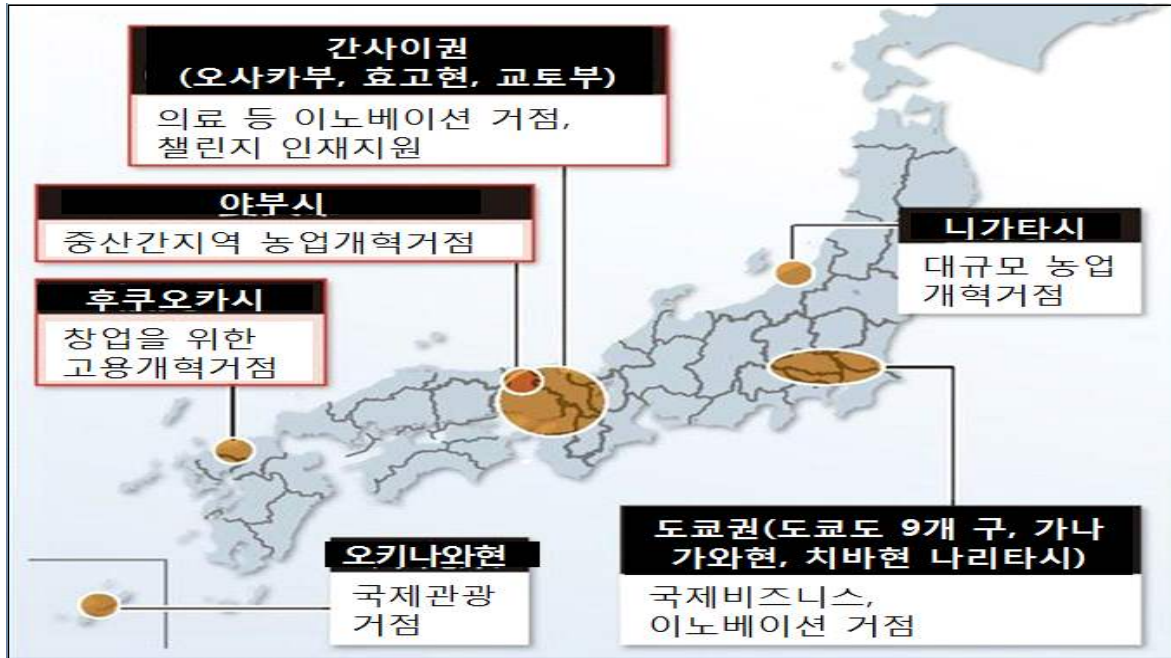
주 : 금융지원 조치로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자금대출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금융기관에 보전하는 「국가전략특구 지원 이자보급금」 제도 도입

자료: 수상관저(http://www.kantei.go.jp/jp/headline/kokkasenryaku_tokku2013.html)

3) 지정 현황

- 동경권·간사이권·후쿠오카시는 대도시 산업혁신거점, 야부시·니가타시는 농업개혁거점, 오키나와현은 관광거점으로 개발되는 등 6개 국가전략특구 지정

<일본의 국가전략특구 지정현황>



자료: 산경신문, 2014.11.17

- 동경권에는 국제 의료시설, 국제비즈니스 교류 거점, 교통망 정비, 세계 최고 수준 숙박시설, MICE 기능 강화 다목적홀, 외국인거주시설 등 메가시티 기능을 강화하는 25개 사업 중점 추진

<동경권 국가전략특구 추진 사업>

유형	사업 내용
국가전략 민간도시재생사업(1건)	·히비야 지역 : 문화예술, 벤처 육성 사업 추진
국가전략도시계획 건축물 정비사업 (6건)	·다케시바 지역 : 도유지 활용 새로운 산업무역센터, 콘텐츠연구, 인재육성, 외국인 거주 생활시설 정비 ·도라노몬 율초메 지역: 산업육성, 해외전개 지원 비즈니스 시설, 외국인 거주자 생활지원 시설 정비 ·오테마치 잇초메 지역 : 비즈니스 교류, MICE 기능 강화 다목적 홀, 세계 최고 수준 숙박시설 등 국가교류비즈니스 시설 정비 ·도라노몬 잇초메 지역: 도쿄 메트로 히 비야선 신역의 정비에 맞추어 버스터미널, 보행자 네트워크, 국제 비즈니스 교류시설 정비 ·야잇초메 지역 : 동경역, 공항 등 지방 액세스강화 사업, 대규모 지하철 버스 터미널, 국제 의료시설, 국제비즈니스 교류 거점 정비 ·야 니 초메 지역 : 도쿄역, 공항, 땅, 국제관광, 정보시설 ·아타고 지역 : 외국인 주택 아파트 서비스
국가전략 도로 점용사업(4건)	·오테마치·마루노우치 지역, 신쥬쿠 부심 등에 '맛있는 길' 조성
보험외병용요양 관련 사업(6건)	·게이오 의대, 동경대 의대, 국립 암센터 등의 의료기술, 치료제 등의 개발 사업
국가전략특별구역 고도의료제공사업(6건)	·암연구회, 요코야마 의대, 게이오 의대, 대학 등의 의료시설 정비 사업
2국간협정기반 외국 의사업무해금 사업(3건)	·게이오 의대, 순천당 의원 등의 외국인 의사 총원 사업

III 시사점

□우리도 수도권규제 폐지, 대도시권 개발로 국토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 일본은 40년간 채택했던 ‘수도권억제-지방지원’이라는 국토정책 기조를 ’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발전’으로 전환하고 수도권규제 폐지
 - ’90년대 이후 버블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불황이 지속되고 기업 해외이전이 가속화되면서 ‘수도권 억제 - 지방발전 지원’ 중심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증가
 - ’02년에 경제사회적 효과가 종료되었다고 판단, 공업제한법을 폐지하고 ’00년 고이즈미 내각 출범 이후 국토정책 기조를 ‘도시 중심의 자립적 균형발전’으로 전환
- 반면 우리나라는 ’82년에 수도권규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근본적인 변화 없이 일부 규제만 완화하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 수도권규제 경과>

구분	내용
도입	○ ‘대도시 인구집중방지책’(’64년)을 시작으로 ’70년대말까지 다양한 대책 시행
체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82), 법적 구속력을 갖추고 체계화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해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
완화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및 규제 완화 추진(’94) - 수도권정책의 목적이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서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으로 전환 ○ 행정중심도시·혁신도시 건설과 연계한 수도권규제 완화(’04) - 첨단업종 대기기업의 기존공장 증설허용(삼성전자, 쌍용차 등), 첨단업종 대기기업 성장관리권역내 신·증설 허용(파주 LCD공장·부품업체, 3M 등) ○ 공장입지 규제완화 등 수도권규제 정비(’09년) - 과밀억제 권역·성장관리권역 : 산업단지 및 첨단업종에 대한 규제완화 - 자연보전권역 : 일부 면적규제 완화

-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토정책 패러다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을 폐지하고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 발전 전략’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
 - 저성장 기조 지속, 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 서비스업 위주로 산업구조 재편 등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는 일본이 수도권규제를 폐지한 시기와 유사한 상황

한·일 경제상황 비교

	한국	일본
제조업 해외생산 비율	4.6%('02) → 18.0%('12)	3.0%('85) → 14.0%('99)
수도권 ¹⁾ 제조업 종사자 비중	20.5%('06) → 17.0% ('13)	41.1%('60) → 14.2%('99)
수도권 ¹⁾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	71.3%('06) → 75.2% ('13)	13.1%('60) → 29.6%('99)

주 1: 일본은 기성시가지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전국사업체 조사, 일본 국토통상성, 「국토심의회 수도권정비 분과위 회의록」, 2001.11

-기업의 이전 대상지역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 개방경제 하에 국토균형발전 유도를 위한 방편으로써의 수도권규제는 한계가 있음

- 현정부의 지역발전 전략³⁾에 포함된 지역 중심(거점) 도시 육성정책과 병행해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 필요

- 일본은 '00년대 이후 동경을 포함한 수도권을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메가시티로 발전시키기 위해 도시재생 및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추진
 - 최근에는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 외국기업 유치에 위한 각종 특구를 도쿄권에 지정하는 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강조
 - 도시재생 및 산업경쟁력 강화정책에 따라 동경권으로의 인구 재집중 현상이 나타났지만 동경권에 대한 국제경쟁력 제고정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
-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세계 주요 대도시를 글로벌 경쟁대상으로 보고 런던과 파리를 메가시티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와 각종 지원책 시행 중

<주요 선진국의 수도권 발전정책 추진 현황>

	수도권 규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
영국 (런던권)	·공장/사무실 허가지 폐지('81년)	·템즈강 중심의 도크랜드('81년), 런던 동부 테크시티('10) ·런던플랜('04) 및 스마트 런던플랜('13)
프랑스 (일드 프랑스)	·공장/사무실 신설·허가제 폐지('85년)	·파리 서북부 라데팡스('90), 파리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08) ·그랑파리 프로젝트('07)
일본 (동경권)	·공업제한법 폐지('02)	·도시재생특별조치('02), 국제총합전략특구('11) ·국가전략특구('13)

3) 현정부는 “지역희망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맞춤형·패키지 지원, 지역주도 및 협력강화 등의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중. 핵심인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은 전국 어디서나 주민이 불편함이 없이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 중심도시, 농어촌중심지(읍면), 배후마을을 포괄하는 개념.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 중심지-마을’을 공공·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

- 일본 등 선진국이 국가전략적으로 수도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감안, 우리나라도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모색 필요
 - 지역 간 글로벌 경쟁 심화, 저성장 지속 등 우리나라 수도권이 처한 외부적 환경도 일본과 유사한 상황으로 동경권과 서울권의 경쟁이 불가피

□ 국토개발정책 추진 체계 정비

- 일본은 총리가 중심이 되어 국제전략총합특구, 국가전략특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선정(Top-down)과 지자체 신청(Bottom up) 방식 병행
 - 국제전략총합특구 사업의 경우 추진본부장을 총리가 맡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사업은 총리가 관련 자문회의 의장을 맡고 최종 승인
 - 국제전략총합특구는 특구추진본부에서 지자체 신청안을 심사해서 선정하고(Top-down), 국가전략특구는 특구추진본부에서 지정(Bottom up)
- 우리나라도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 대도시권 발전전략,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 종합적인 국토정책을 수립·시행할 필요
 - 대통령이 '15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합적인 국토정책'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국토정책 관련 비전, 로드맵, 세부계획 마련 필요

□ 단기적으로 기업 투자 관련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

-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당장 수요가 있는 시급한 기업 투자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할 필요
 -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 현재 대기수요가 있어 즉시 투자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규제를 완화해야함
- 자연보전권역 지정 취지에 맞게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 검토
- 경기북부 등 사실상 수도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경기도 내 낙후지역에 대해서도 수도권규제 적용 예외 인정 필요

참고문헌

- 국토연구원, 「수도권 규제정책의 시대적 변화와 향후 전망」, 2015.7
- 국토연구원, 「아베정권의 일본재흥전략과 공간정책적 시사점」, 2013.7
- 국토연구원, 「일본의 국제전략총합특구 제도」, 2012. 10.
- 국회입법조사처, 「수도권규제 관련 해외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2013. 4.
- 경기연구원, 「21세기 메가시티 경쟁시대 수도권규제의 진단과 해법」, 2015.6
- 경기연구원, 「주요 선진국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환과 우리나라 시사점」, 2008. 3
- 경기연구원, 「일본의 수도권규제 폐지정책의 평가와 시사점」, 2006. 3.
- 경기연구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모델 정립에 관한 연구」, 2005. 6.
- 일본, 국토교통성, 「首都圏整備法等に基づく大都市圏政策の見直し」, 2011
- 일본, 국토교통성, 「首都圏整備に関する年次報告」, 2011
- 일본, 국토교통성, 「수도권광역지방계획」, 2009
- 일본, 국토교통성, 「국토심의회 수도권정비 분과위 회의록」, 2001.11
- 일본, 국토교통성, 「수도권백서」, 각년도
-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대안」, 2008. 2.
- 전국경제인연합회, 「수도권규제 문제점과 합리화 방향」, 2014.12
- 한국행정학회, 「미래지향적 수도권 정책」 (김경환, 손재영), 2003.
- 한국경제연구원, 「수도권규제에 대한 재인식」 (김경환, 임상준), 2005.

□ 인터넷사이트

-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
- http://www.seisakukikaku.metro.tokyo.jp/invest_tokyo/japanese/why-tokyo/case-studies/index.html
- http://www.seisakukikaku.metro.tokyo.jp/invest_tokyo/japanese/why-tokyo/case-studies/2013.html
- http://www.seisakukikaku.metro.tokyo.jp/invest_tokyo/japanese/news-events/news_2015.html
-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tokyoken.html>
- <http://www.kantei.go.jp/jp/singi/tiiki/kokusentoc/kuikikeikaku.html#tokyoken>
- <http://www.projectdesign.jp/201305/pn-tokyo/000534.php>
- <https://www.kkr.mlit.go.jp/kokudokeikaku/shaping/index.html>
- http://www.mlit.go.jp/toshi/toshi_tk1_000017.html